

고, 조사할 때는 으레 이 파일을 들고 나온다”
고 말한다.

지난 1953년부터 25년간 한국신학대학·
서울여대 교수로 재직했던 그는 그동안 독재
에 맞서 민주화운동, 여성해방운동의 일선에
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온 여성운동가. 현재
한국기독교인권위원회(KNCC), 세계선교
위원회(WCC)에서 위원직을 맡고 있으
며, ‘적극적인 차원’의 여성운동을 펼치는
여성단체연합의 회장직을 맡기도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앞으로는 여성의 권리와
모성보호 문제를 넘어 군축과 반핵운동까지
활동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군축·반핵문제
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같은 맥락에서 국가보안법철폐운동도 본격
적으로 벌여나갈 겁니다.”

미혼으로 현재 서초동아파트에서 조카내
외와 함께 살고 있는 그는 자원봉사, 인권운
동 그리고 각종 집회에 나가 강연을 하는
등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승기 기자)

연장이란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박부총재는 이번 사건이 보안사의 관행에
의한 것이라거나 혹은 실무자들의 ‘과잉충
성’에서 빚어진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보안
사 책임자가 대통령에게 ‘직보(直報)’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졌온 만큼 ‘위’에서 그런
사찰보고를 원하거나 최소한 묵인하지 않았
겠느냐는 것.



평화민주당부총재

박영숙 ‘남편 안병무교수와 함께 감시 받아’

현 역여성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유사
시 보호해야 할 인사’로 꼽힌 평민당
박영숙부총재(58)는 보안사가 자신
을 포함, 민간인 1천3백여명을 사찰해온
사실이 밝혀지자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어디야 인권사와
노동운동가들뿐입니까. 한마디로 인권침해
이자 불법행위에 대한 공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이번 사건으로 6공화국이 군정의

“이번 보안사사찰 파문은 통치권자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주었다고 생각해요.
민간인까지 사찰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민주적 국가운영에 자신감이 없어서야 되겠
습니까. 통치권자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기관이나 행정부서에서 불법적으로 민간
인을 감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국민
업무의 한계를 명시하고 안기부 등에도 감사
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는, 차제에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로 여론의 비난
이 빚발칠 무렵 노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
을 선포했는데, 이에 대해 그는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군사문화의 발상”이라며, “국민을
적으로 가상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평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지난 8월말 ‘녹색의 전화’를 개
설, 각종 공해 감시활동을 펴고 있는 그는
일찍부터 여성운동, 사회운동에 헌신해온
여성운동계의 선두주자.

55년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후 줄곧
YWCA에서 활동해오다 84년 청량리 경찰
서, 여대생추행사건 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화운동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비롯, 부천서 성고
문 사건, 최루탄 추방운동, 용공조작 및 고문
철폐 운동 등을 통해 사회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그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87년 11월
평민당에 입당,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이같은 경력 때문인지 그에게는 항상 감시
의 눈초리가 따랐던 게 사실. 그는 “70, 80
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찰대상이 된 것 같다”고 말하며, “80년대
들어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미행, 연금을
당한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보안사 사찰명단에는 남편 안병무
박사(68)도 올라 부부가 모두 감시대상자
가 됐는데, 박부총재의 ‘개인특성’란에는
“부(夫) 안병무는 민중신학자이며 좌골.
재야에서 활동타 13대 총선시 전국구 1번
원내 진출, 부총재 피선. 김대중의 절대 신임
및 당내 평민연 핵심요원”으로, 안박사는
“한신대 해직교수로 향린교회를 설립하여
신학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구속자 석방 등
대정부 비판활동을 하고 있음. 80. 12. 10
정화대상자 A급”으로 기록해놓고 있다.

안박사는 한국신학연구소를 운영하는